

반일 여론 고조... “日 안가고, 안쓴다” 본격적 움직임



6일 오후 대구 달서구 대천동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한 시민이 일본 경제 보복의 부당함과 일본 제품 불매 동참을 호소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이 한국산 제품 수출을 규제하는 등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도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연달아 불매운동, 판매 중지를 선언하는 등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5일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을 규탄하고 일본 제품의 판매 중지를 선언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자영업단체들은 과거사에 대한 일고의 반성 없이 무역보복을 획책하는 일본을 규탄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 업종에 걸쳐 일본 제품 판매 중지 운동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일부 소매점에서는 일본 담배와 맥주에 대해 전량 반품처리하고 판매중지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들은 일본 제품에 대한 전량 반품·발주 중지·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관련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도 같은 시간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상인들 “일본제품 판매 중지” 선언 겨레하나·정의연 등 규탄 집회·성명

전날에도 시민·사회 단체들의 관련 집회와 성명 발표가 이어졌다.

시민단체 서울겨레하나는 전날 오후 7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서울겨레하나 측은 성명서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고령의 몸을 이끌고 일본까지 찾아가 일본기업들과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면서 “대화는 거절하고 배상을 외면하다니 보복조치까지 하는 것은 비열한 망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시작된 일본기업 불매운동은 국민들이 일본의 어떠한 협박에도 불리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면서 “국민들과 함께 일본으로부터 강제동원 사죄, 배상을 받기 위한 항의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관련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도 같은 날 일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일본정부는 알아야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피해자들을 불모로 하는 경제조치로 암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 명예회복을 불모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범죄사실 인정과 법적책임 이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상에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다. SNS에선 “평소 자주 먹었던 일본 맥주에서 유럽 맥주로 바꿔야겠다”, “올 여름 계획했던 일본 여행 비행기 표를 취소했다”는 등의 반응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과거사 반성없는 무역보복 규탄, 일본산 제품 판매 전면 중단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경제제재로 평가된다.

이 뿐 아니라 일본 정부는 안보상 우방국가인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일본은 “한국과의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고 규제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 정부가 보복성으로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해 경제 제재를 가한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제재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반하는 차별적 무역이라 규정하고,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뉴시스



불붙는 ‘일제 불매운동’...긴장하는 유통업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본 브랜드 명단 돌아 유니클로 매장 앞 불매운동 1인시위도 “경제보복 장기화되면 매출 영향있을 것”

일본의 경제보복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제 의류 및 식음료 소비를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자동차나 카메라 등 고가의 상품들은 구매 빈도가 잦은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지만, 대체 브랜드가 많은 소비자의 특성 상 유통업계는 반일감정이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4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2019년 일본 베스트 브랜드’라는 제목으로 도요타, 혼다, 캐논, 니콘, 무인양품, ABC마트 등의 로고가 나열된 게시물이 돌고 있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무인양품 매장은 방문한 소비자들 손에 꼽을 정도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이 점포 관계자는 “날마다 방문 고객 수에 편차가 있어 한일관계 때문이라고 말할수는 없지만 오늘은 고객이 없기는 한 편”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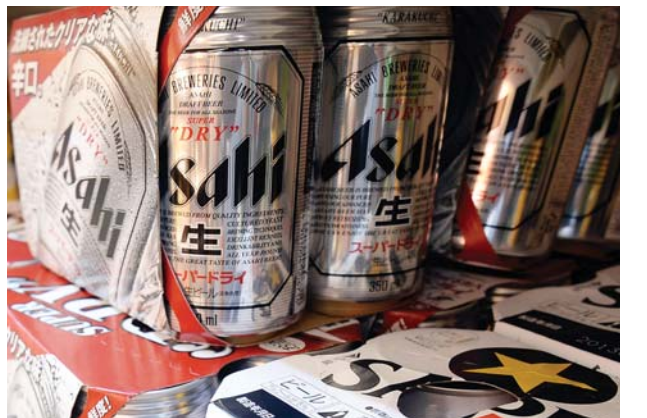
대표적 일본 패션 브랜드인 유니클로에도 불뿔이 튀었다. 이날 유니클로 명동점 앞에는 “강제징용 배상없고 경제보복! 적반하장 일본, 국민들이 분노한다”라는 팻말을 든 시민단체 관계자가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연매출 1조3732억원에 기록한 유니클로는 몇 번의 불매운동에도 4년 연속 매출 1조원을 달성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브랜드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불매운동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지금으로서는 매출 상 눈에 띄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편의점 CU 관계자는 “최근 일주일간 일본 맥주 매출이 전주 대비 0.2% 감소하긴 했지만 1% 내 변동은 날씨 변화에도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 유의미한 통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를 걱정하는 업체도 있었다. 수입액주 1위 브랜드인 아사히의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크지 않지만 불매운동이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가운데 일본 기업이 아닌데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회사도 나온다. 생활용품기업 ‘다이스’는



외국인기업이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국기업에도 불매운동 대상 기업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일본 다이소와는 무관하고 로열티 지급도 하지 않는다는 게 다이소의 입장이다.

불매운동이 격화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일본산 맥주 수입업체는 “예전에 전범기업으로도 여러번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실제 매출엔 영향이 없었다”고 했다. 반면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직 초기이다보니 피부로 느껴지는 반응은 없다”면서도 경제보복이 장기화되면 피해 사례가 나오면서 불매운동에 불이 붙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뉴시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